

정부 “희생자 유가족 뜻 최우선 사고수습 총력 지원”

최 권한대행 “가용자원 총동원”
사고조사 엄정 진행·투명 공개
특별재난지역 지원 적기 집행
우원식 의장과 대책 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며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경찰청에는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 나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기 전이라도 사고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제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항공안전체제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

이 아프다”며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애도하고 유가족 위로하는 마음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참사 수습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근조 리본을 상의에 단 두 사람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비공개 접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은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대책과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다음날 국회를 찾은 것은 사고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우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3차 중대본 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예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기를 계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 희생자 유가족 1대1 전담공무원 지정

장례 절차·시설 이용 등 지원
심리적 안정 등 전문가 상담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과장급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1대1 전담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4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4차 지대본 회의’에서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 장례 절차 및 시설 이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유가족 지원을 위해 과장급으로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장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전담공무원은 먼저 희생자 장례지원에 힘쓴다. 장례시설 및 5개 자치구와 협력해 유가족이 광주지역 장례시설 이용을

원하면 즉각 연결해 지원한다. 또 유가족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물·담요·임시주거시설 등 생필품을 지원한다. 유가족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동구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유가족의 심리회복 지원과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이나 동행인 등 간접 피해자들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희생자 유가족과 신속·정확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키로 했다”며 “유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0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0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지도부, 무안서 참사 대책 마련 ‘한 목소리’

이재명 “지금 중요한 건 수습”
권성동 “최대한 역할 다하겠다”

여야 지도부는 30일 무안을 찾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목포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또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그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

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전남도당,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을 찾아 항공 사고 피해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말 황망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사고가 수습 되도록 최대한 저희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더 힘을 내시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공조본,尹 체포영장 청구...

1면서 계속 하지만 경호처가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처럼 체포 역시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것

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후 검토를 통해 대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수수색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지난 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다.

본사인사

- ◇ 승진
 - ▲ 최권범 편집국 부국장대우
 - ▲ 김성수 논설위원실 부장
 - ▲ 심숙희 경영본부 부장
 - ▲ 김경희 편집국 부장대우
 - ▲ 박정철 사업본부 차장
 - ▲ 김윤복 강진주재 차장
 - ▲ 김대영 곡성주재 차장
 - ▲ 김용의 나주주재 차장
 - ▲ 서여운 편집국 차장대우
 - ▲ 나건호 편집국 차장대우
- (2025년 1월 1일자)